

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: 미·중 관계를 중심으로

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·유라시아본부
미주팀 부연구위원
yoonyj@kiep.go.kr

김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·유라시아본부
미주팀 전문연구원
jhkim@kiep.go.kr

권혁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·유라시아본부
미주팀 연구원
hjkwon@kiep.go.kr

김원기 전남대학교 교수
wgkim@jnu.ac.kr

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2016년 11월 8일 열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
 -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 ‘미국을 다시 위대하게(Make America Great Again)’라는 슬로건하에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
 -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 및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해 축적된 불만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백인 노동계층의 지지를 확보하며 승리
-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 당시부터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정책을 펼 것을 예고
 -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과 이에 편승한 교역국들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심화된 미국의 무역적자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기인
- 미·중 간 통상 갈등은 장기간 지속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
 -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을 기점으로 환율조작, 보조금 지급, 설비 현지화(localization to barriers), 지적재산권 등 다수 통상 관련 이슈에서 미국은 중국을 요주의 국가로 지목
 -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지목되고 있어 트럼프 무역정책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
-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며 미·중 간 통상 갈등이 심화될 시 한국에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
 - 두 국가는 한국의 첫 번째, 두 번째 최대 교역국가들이며 세계경제의 양대 축 간의 통상 갈등이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
 - 또한 양국간 통상 갈등이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확산으로 퍼질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할 필요

2. 조사 및 분석 결과

1)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추진

-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보호무역주의 관련 움직임을 보이며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을 압박
 -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들에 대한 재검토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: Trans-Pacific Partnership)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
 - 이 외에도 행정명령, 대통령 메모 등을 통해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적자 원인 검토, 무역구제조치 관련 조사 개시를 지시하며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을 압박
- 미국정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무역구제조치와 더불어 다양한 무역제재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이전 정권과 대비되는 모습
 - 201조, 232조, 301조 등 기존에 미국이 드물게 사용하던 무역제재 수단들을 발동하기 위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임.
 - 미국이 WTO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법보다는 자국법에 의거한 수입제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

2) 대중국 반덤핑 조치로 인한 무역굴절효과

- 트럼프 행정부는 반덤핑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
 -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권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반덤핑/상계관세 부과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부과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반덤핑 조치는 해당 국가의 대미국 수출을 감소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, 제3국들의 동(同)제품의 대미국 수출을 증가하는 이른바 무역굴절효과(trade deflection effect)를 불러올 수 있음.
- 연구 결과 미국의 반덤핑 조치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로 인해 신흥국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의 반사이익에 대한 여부는 의문
 - 미국이 중국의 특정 수출품에 반덤핑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, OECD 국가, 신흥국(비OECD 국가) 모두 무역굴절효과를 보게 되며 그중에서도 신흥국들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됨.
 - 반면 한국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를 본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음.

3) 환율조작국 지정 등에 따른 위안화 환율 절상으로 인한 양국 경제효과 분석

-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발언과 관련하여 위안화 환율 절상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분석

- 트럼프 대통령은 경선·대선 기간 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2017년 4월, 10월에 발간된 미 재무부의 미국의 주요 교역국 환율보고서에서는 중국을 모니터링 대상 국가로 지정
- 하지만 향후에도 미국이 환율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며, 이에 따른 위안화 절상 효과를 분석

- 위안화 절상은 양국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.

-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위안화 절상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, 이는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남.
- 오히려 산업생산 등 미국과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

4)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

-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한국에 주는 영향도 다방면에서 존재

- 한국의 중국 수출품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수준인 만큼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조치 심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
- 반면 한국의 대미국 수출을 증가할 가능성 존재
- 미국의 무역제재조치 심화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이루어질 경우 미·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.

3. 정책적 시사점

1)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견제로 인한 한국의 피해

- 트럼프 행정부하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 수입제재 수단은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한국이 입을 피해 가능성 상존

- 반덤핑/상계관세의 경우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제재하므로 이로 인해 한국이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 가능성은 낮음.

- 하지만 201조의 경우 미국의 특정 수입품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한국 수출품의 대미 수출비중이 높을 경우 한국의 관련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음.
- 현재 예비판정이 나온 201조 관련 품목들(태양광전지, 세탁기)은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미국정부의 수입제재가 최종적으로 집행될 경우 한국 수출품들 역시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.

2)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

- 한국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결정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.
 - 미·중 간 통상 갈등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가로막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
 - 이와 더불어 사드(THAAD)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절실
- 한국기업들은 중국시장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함.
 - 중국 노동시장은 지속적인 임금상승으로 인해 저렴한 노동인력에 대한 매력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
 - 기존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은 중국을 통한 미국시장 진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부분을 감안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의 중국시장 진출 등 차별화 전략이 필요

3)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세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비

- 미·중 통상 마찰의 확대는 중국의 제3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
 -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무역굴절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여타 국가로 동 제품의 수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음.
 - 중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대상국가로 작용할 수 있음.
- 한국은 무역굴절효과로 인한 중국산 제품 국내 유입증가에 대비할 필요
 -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경우 흑자 감소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.
 -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중국의 덤핑 수출에 대비하여 대중국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

4) 반덤핑 및 환율조작국 선정에 따른 효과의 한계 적극적 홍보

●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국 수입품 제재전략의 한계성 노출

-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대중국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기타 국가들로 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.
-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략 역시 인위적인 위안화 절상이 중국은 물론 미국경제에도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덤핑 및 환율조작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위한 논리 개발 필요
-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으로 언급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의존도 탈피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필요 **KIEP**